

2021년도 국정감사 요 구 자 료

2021. 10



대통령비서실

목 차

• 강민국 위원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
2. 재산현황	
2-1. 토지	2
2-2. 건물	2
2-3. 비품	3
2-4. 자동차류	4
3.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3-1. 상여금, 성과금, 제수당 포함	4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5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5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5
5. 예산전용 내역	6
6. 예비비 사용내역	7
7. 피고소, 고발 현황	7
8. 피진정 현황	7
9.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8

10.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성범죄, 음주운전, 상해, 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9
11. 10번 사항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문 전문 ..	9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9
13. 소관기관 내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0

• 김기현 위원

1.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피살 경위를 알려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2
2.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경찰청에 대해 ‘피격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3
3. 피격사건 이후 유족이 청와대에 보낸 질의서, 공개요청, 진정, 민원 및 이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체	14
4.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활동 및 노력 ...	15
5. 피격 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 및 월북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6
6. 피격 사건 이후 북한에 요구하거나 북한과 협의한 내역 일체	17
7. 유족과 통일부장관 면담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7
8. 피격 사건,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일체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각 사안별 입장	18
9. 서울중앙법원이 경문협에 탈북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경문협이 거절(항고 및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20

10. 경문협이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건어 북한에 송금한 것 관련,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통일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	21
11. 경문협의 법원의 저작권료 지급 명령 거부 이유인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창작자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논리에 대한 입장	22
12. 북한 정권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관계를 우리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와 같다는 식의 경문협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	23
13. 북한의 개인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근거	24
14. 6.25 국군 포로들이 북한 독재정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정받았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채권 추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통일부의 경문협의 대북송금 내역 공개 요청 거부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25
15. 경문협과 같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도 여타 단체의 경우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기관인 통일부는 경문협이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	26
16. 작년 12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 삭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27
17. 이 재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법원,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 일체	27
18.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청와대의 기존 입장	27

19.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3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NLL 재확정 문제와 공동어로 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 및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	27
20.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한 내용 일체	28
21.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29
22.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0
23. 작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손실배상 요청 현황	31
24. 연락사무소 폭파 대응 관련 관계 부처 협의 현황	31
25. 우리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 요구 계획	31
26. 오병권 행정부지사 임명 절차 일체	32
27.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저출산 문제 관련 발언 일체	33
28. 저출산 문제 해결 관련 대통령 공약 내용 및 이행 실적	35
29. 노무현 정부 이후 연도별 인구 자연감소 및 합계출산율	37
30.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정책 일체	38
31.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들과의 회의	43
32.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 일체	45
33.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일체	46
34. 정부 출범 이후 월별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	65

35.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부작용 및 사망 사건 관련 청원글 현황	66
36. 백신 접종 이후 월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	67
37. 코로나 4단계 이후 단계별 방역수칙 일체	68
38.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	68
39.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방역 단계 일체	68
40.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수칙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 영업제한 조치 일체	68
41. 노무현 정부 이후 각 정부별 연도별 국가채무 누계	69

• 김정재 위원

1. 조직도	71
2. 현직 각 실장, 각 수석 비서관 및 각 비서관등 간부들의 약력	71
3. 청와대 부서별 업무 분장 및 급수별, 성별 근무 인원	74
4. 청와대 현재 특별보좌관 현황 및 약력	75
5. 청와대 내 각 부서별 주요 중점 업무	76
6. 취임 이후 청와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사유	77
7.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파일	77
8.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관 현황	77
9. 취임 이후 청와대 내 성비위 발생 현황 및 징계현황	77
10.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	78
11. 취임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88
12. 취임 이후 자체감사 결과	90

13. 취입 이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90
14. 취입 이후 퇴직자 현황	91
15. 취입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6
16. 5급 이상 별정직 직원 현황	96
17. 취입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98
18. 취입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 결과	98
19. 취입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검찰 통보 및 처리 현황	98
20. 취입 이후 검찰 및 경찰의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	99
21. 취입 이후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99
22. 취입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100
23. 취입 이후 신규채용 현황	100
24. 취입 이후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	101
25. 취입 이후 연도별 공채 및 특채 채용 현황	101
26. 취입 이후 임금현황	102
27. 취입 이후 홍보 현황	103
28. 취입 이후 홍보물 일체	103
29. 취입 이후 용역 발주현황	104
30. 취입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 현황	105
31. 취입 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간행물 목록	106
32. 취입 이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	106
33. 취입 이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107

34. 취임 이후 소속직원의 직무 외 영리수입현황	107
35. 취임 이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08
36.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109
37. 취임 이후 법인카드 사용 관련	110
38.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전용내역서	111
39.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불용내역서	112
40.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이월내역서	113
41. 취임 이후 각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113
42.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위해 수립한 자체지침 ..	114
43. 2018년 이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 사본	114
44. 취임 이후 제2부속실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115
45. 취임 이후 TF팀 운영 현황	115
46. 취임 이후 연도별 각부서별 대통령 지시사항	116
47. 취임 이후 표창 발급 내역	116
48. 연도별 국민청원 등록 현황	117
49. 청와대 및 정부에서 답변한 국민청원 관련 청원명, 게시일자, 내용, 참여인원, 답변일, 답변내용 등	118
50. 국민청원 비공개, 삭제 기준	119
5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120
52.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입장	120
53.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보고내용과 대통령비서실 답변 원본 ...	121

54. 산업부가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원본	121
55.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원본 ·	121
56. 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원본	121
57.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파일	121
58. 월성 1호기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121
59. 취임 이후 보고받은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서 원본	121
60. 취임 이후 보고받은 “에너지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문서 원본 ·	121
61. 취임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현황	122
62. 취임이후 NSC 개최현황	123
63.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현황 ..	126
64. 예산으로 집행된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사용내역 점검	126
65.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있는 감찰반 관련	127
6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주관한 사업의 용역계약 체결 내역	128
67. 2019년 3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128
68. 2020년 3월, 8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128
69.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황	129
70. 취임 이후 연도별 각 부처별 주요 업무 지시	130
7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	130
72.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과다 수익이 돌아간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입장	131

73. 부처별 파견공무원현황	132
74.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관련	132

• 임오경 위원

1. 2020년~2021년 8월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34
2. 최근 5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법률안 등	136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황	136
4. 최근 2년간 발간된 연구용역보고서 리스트 및 각 보고서 사본	137
5. 최근 2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138
6.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138
7.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	139
8.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과 사업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	139
9. 최근 2년간 실시한 설문,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결과	139
10.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귀 기관의 규제혁신 성과	140
1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147
12.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개	148
13. 최근 3년간 기관 자체평가,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	148

• 전주혜 위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	149
2. 최근 3년간 직제개편 등 조직 및 인사 변동사항	160

3.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정, 개정 내용 및 사유	162
4.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63
5.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65
6.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기소, 수사, 내부 자체 징계 현황 ..	166
7. 최근 3년간 전 직원 국내 출장 현황 및 내역	167
8.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및 국외여비 지급 내역	167
9. 국민신문고 관련 내규, 규칙 등 내부 심사 규정 일체	167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내역 및 결과, 재취업 현황	168

• 추경호 위원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70
2. 2017년부터 최근까지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0
3.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2
4. 2017년부터 최근까지 비서실 직원의 비위 현황 및 조치내역, 징계위원회 소집현황 및 조치결과	182
5.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규정	183
6.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체 혹은 외부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역	184
7.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간행물 목록	185
8.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채용한 별정직행정관, 행정요원 목록 ...	186
9.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187
10.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188

11.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비서실 직원 직급별 급여, 성과급 내역 ..	188
12.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1호~3호 감찰실적 현황 및 2항에 규정한 비리첩보 확인 실적, 수사기관 수사의뢰 실적	189
13.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해킹침해시도, 정보 침해현황 등 피해발상 상세 내역	190
14. 현 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 물품 구매 내역	191
15.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	193
16. 취임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및 임기 종료시까지 지급될 내역	193
17.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내게 될 사저, 경호동 등 건립비용, 경호비용, 퇴직 이후 지급될 연금, 퇴직 이후 배당되는 비서관급 인력에 지급되는 급여 내역	194
18. 현 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 NSC 개최 현황 및 대통령 참석 내역	195

• 태영호 위원

1. 각종 감사결과 일체	197
2. 각종 위원회 권고 및 지적 사항 등	199
3. 각종 옴부즈맨 운영 결과 및 부처 소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실적 ...	199
4. 산하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징계 유형별, 처분별 현황	199
5. 분야별 각종 민원 현황	200
6. 최근 3년간 분야별 보안사고 현황 및 비밀누설 및 훼손 등 비밀 및 보안 관련 법규 위반 현황	200
7. 업무 관련 자체 평가, 각종 설문조사,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200

8. 산하기관 경영평가, 고유사업 추진 실적평가, 조직 진단, 고객만족도 등 결과 및 산하기관 성과급 지급 내역	201
9.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겸직금지 의무 및 영리의무 위반 현황 ..	201
10. 부처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협회 및 소관기관 재취업 등 전관예우 현황 ..	201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분현황	201
12.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02
13. 김영란법 위반 현황	202
14. 음주운전 현황	202
15. 미투현황 및 직원 성폭력 범죄 현황	203
16.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204
17. 시민단체 지원 현황	206
18. 업무추진비 및 특수업무경비 사용 현황	206
19. 위원회 포함 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연수 관련	207

강 민 국 위 원

1. 직종별·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2021. 10. 12. 현재)

-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정의 효율적 보좌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산 현황

2-1. 토지(소재지, 면적, 공시가격)

2-2. 건물(자가 임차 구분, 면적, 공시가격)

- ☐ 국유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량	면적
토지		262,167m ²
건물	29동	42,172m ²

- 다만, 청와대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세부 사항은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 비품 (2021. 10. 12. 현재, 건당 5천만원 이상, 품명, 용도,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과 관련된 중요 보안 사항임으로, 품종별 현황에 대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물품 취득 현황 >

(21.10.12. 기준, 단위 : 백만원)

품 종	품종별 세부 품목	취득액
기 타 잡 기 기	음향기기, 영상기기 등	572
사 무 용 기 기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등	6,318
산 업 기 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등	1,353
운 반 · 건 설 기 계 및 차 량	농업용기계 등	50
의 료 및 화 학 분 석 기 기	환경조절장치 등	98
인 쇄 사 진 및 시 청 각 기 기	영상회의 시스템 등	351
전 기 · 통 신 기 기	방화벽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등	1,664
계		10,406

2-4. 자동차류(2021.10.12. 현재, 취득년월일, 취득가격, 용도)

□ 공용차량 현황은 총 69대입니다.

- 다만, 청와대 공용차량 세부현황은 긴급대응 및 보안유지 등의 기관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여체계 및 복리후생 지원 현황

3-1. 상여금, 성과금, 제수당 포함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보수 규정」 제39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상여금 및 성과금,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2.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별 금액 및 1인당 평균액)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3. 골프 및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3-4.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근 3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측 요구사항과 기관에서 수용한 요구사항 비교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예산전용 내역(2020년, 2021년 현재까지)

□ 예산 전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 전용내역(2017~2021년)

o 2017년 : 해당사항 없음

o 2018년

(단위: 천 원)

전용 증액			재원			전용 사유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1031-301-210-01	국정운영관리	140,000	1031-301-260-01	국정운영관리	140,000	인쇄비 등 부족
1011-200-220-01	기본경비	77,000	1011-200-210-01	기본경비	22,000	국내여비 부족
			1011-200-210-12	기본경비	45,000	
			1011-200-210-14	기본경비	10,000	

o 2019년

(단위: 천 원)

전용 증액			재원			전용 사유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1011-200-220-01	기본경비	100,000	1011-200-210-08	기본경비	130,000	국내·외 여비 부족
1011-200-220-02		30,000				
1011-200-220-01	기본경비	14,000	1011-200-210-02	기본경비	14,000	국내여비 부족
1133-600-430-01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360,677	1133-600-420-03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360,677	자산취득비 전환

o 2020년

(단위: 천 원)

전용 증액			재원			전용 사유
예산과목	내역	금액	예산과목	내역	금액	
1011-200-250-02	기본경비	90,000	1011-200-210-07	기본경비	90,000	직무수행경비 부족

o 2021년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사용내역(2020년, 2021년 현재까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피고소, 고발 현황(2020년, 2021년 현재까지)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관련 수사개시 통보 15건, 결과통보 13건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위 사안들의 경우, 고소·고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8. 피진정 현황(2020년, 2021년 현재까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감사원, 상급기관, 자체 감사결과 조치요구문서 사본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자체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o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o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o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 o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o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 이외 사항(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포함)은 해당사항 없음

10.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성범죄, 음주운전, 상해, 뇌물 관련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 및 조치결과

11. 10번 사항 관련,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공
문 전문

-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과 관련, 수사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 중 음주운전 사
건은 1건(직권면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상해, 뇌물과 관
련하여서는 “해당 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내부 징계 과정 및 징계별 내용 설명

-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21.10.12.)까지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13. 소관기관 내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 ☐ 대통령비서실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2021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기 현 위 원

1.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피살 경위를 알려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 및 2호)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 o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련사항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경찰청에 대해 '(피격 공무원의 채무, 도박 등을 발표한 것이) 피격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해경의 사과 거부 및 관련자 문책 비공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지난 10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청장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실종자와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청장은 '실종자가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는데 같은 동료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경청의 입장을 존중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피격사건 이후 유족이 청와대에 보낸 질의서, 공개요청,
진정, 민원 및 이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체
- 유가족과 공유한 정보 일체 포함

- 유가족측과의 소통을 위해 희생자 아들의 편지에 대해 2020년 10월 8일 대통령 답장과 함께,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 관계부처·기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 다만, 유가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활동 및 노력

- 편지 발송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NSC 상임위를 수 차례 개최하여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 우리측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촉구, 진행 중인 수색상황 점검,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우리 군과 해군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총 41일간 함정, 항공기, 인원 등을 투입하여 사실관계 규명과 실종자 수색에 주력하였으며,
- 또한, 각급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주요국과도 지속 소통하였고, 2020년 10월, UN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 '공동 조사 및 군 통신선 복구 재가동' 등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기관 차원의 노력은 물론, 유관국과의 대화 및 UN 무대 등에서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지속 강구해왔으며,
- 앞으로도 남북대화 재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진상 규명 등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피격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 및 월북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낮아 자진 월북한 것으로 해경청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 피격 사건 이후 이와 관련해 북한에 요구하거나 북한과 협의한 내역 일체

- 없다면 요청하지 않은 이유 명시

7. 지난 2월, 유족과 통일부장관 면담시 요청한 1)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 2)북한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3)북한 방문시 신변 안전 보장, 4)재발방지 노력, 5)사고현장 방문, 6)남북 공동조사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정부(해양경찰청)는 '20.9.21. 서해 공무원 실종신고 접수 직후, 북한 군도 수신가능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총 12회 구조방송을 실시하였으며,

○ 9.23.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실종 어업지도선 공무원 발견시 통보를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한편 북한은 9.25. 통지문을 통해 △사태 발생 경위 설명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 △재방 방지 내용 등을 포함한 답신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9.27.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 상태입니다.

□ 동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적절한 시기에 동 사안을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8. 피격 사건,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일체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각 사안별 입장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 주민 송환 문제('20.1.)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20.11.) △남북관계발전법('21.4.) 등 세 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 왔습니다.
- 북한 주민 송환 관련,
 -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에 근거,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최소한의 요건(명확한 귀순의사 표명)과 절차가 필요한 바, 이 사안의 경우, 진정성 있는 귀순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관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정부는 유가족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수색 상황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였습니다.
 - 실종 신고 접수 즉시 경·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하고, 인근 민간 선박(조업어선)과 협력하였으며, 북측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의 복구 및 재가동을 요청하였습니다.

- 정부는 향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적절한 시기에 동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동 사건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일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 동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입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개정 법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21.3.30. 시행)하는 등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서울중앙법원이 경문협에 탈북국군포로 2명에게 각각 2,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경문협이 거절(항고 및 기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경문협이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건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복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통일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21.4월)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통일부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 정보는 통일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법인의 경영정보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경문협이 법원의 저작권료 지급 명령 거부 이유인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창작자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논리에 대한 입장
- 경문협 계약 상대 및 대북송금 경로 확인 여부 포함

- ☐ 현재 법원에서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 경문협 계약 상대 및 송금 경로 확인 여부는 소관 부처(통일부)에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2. 북한 정권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관계를 우리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와 같다는 식의 경문협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

- ☐ 해당단체(경문협)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송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북한의 개인 저작권 인정 여부와 그 근거

- ☐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6.25 국군 포로들이 북한 독재정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정받았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채권 추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통일부의 경문협 의 대북송금 내역 공개 요청 거부는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 통일부는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 정보는 통일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법인의 경영정보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경문협과 같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도 여타 단체의 경우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공기관인 통일부는 경문협이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

☐ 경문협은 남북관계·통일분야 민간단체로서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입니다.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소관관청인 통일부가 경문협의 활동과 운영이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16. 작년 12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 삭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17. 이 재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법원, 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 일체
18.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청와대의 기존 입장
19.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2013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두고 “NLL 재확정 문제와 공동어로 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 및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

☐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출범 이후 동 재판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 동 사안 관련 청와대의 별도 입장은 없으며,

○ 대법원 판결은 당시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삭제된 초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2013년 5월 문대통령이 블로그에 올린 글은 이와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2.10.24 통일부 국정감사시 류우익 前 장관은 NLL에 대한 정부(노무현 정부 포함)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고 답변

20.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한 내용 일체

- ☐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해왔습니다.
- ☐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으나,
 - 우리 정부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상시 면밀하게 살피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오고 있으며,
 - 북한의 핵 활동 지속은 어떠한 맥락에서도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 우리 정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가동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변 핵활동은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다만, 9.19 평양공동선언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비핵화 상응조치와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작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손실배상 요청 현황

24. 연락사무소 폭파 대응 관련 관계 부처 협의 현황

25. 우리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과 합당한 배상 요구 계획

□ 향후 남북대화 재개시 동 사안에 대해 반드시 논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 재산피해 규모는 102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NSC 상임위원회('20.6.16) 개최 및 결과 브리핑,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서명 발표 등을 통해 북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측의 상황 악화 조치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6. 오병권 행정부지사 임명 절차 일체

- 검증 요청일, 검증 결과, 임명 요청일, 임명 사유, 교체 사유 등

- ☐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저출산 문제 관련 발언 일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2017.12.26.)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노동·고용·주거·교육·보육·성평등 등 아주 다양한 가치가 얹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위원회는 우선 순위를 두어 차별성을 가졌으면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너무도 중요하다. 위원회에서 현상을 드러내면서 예산과 정책집중의 우선 순위를 왜 여기에 두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하고, 또 각부처가 이에 대한 실행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 '18.7.5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과제는 '17.12.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하여 추진하기 위해 '18.12.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 수석보좌관 회의 (2018.9.3.)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500여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 원에서 우선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내년 부터는 3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됩니다. 또 6세 미만 아동 238만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의 호응이 높아서 이미 22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아동수당법 제정(3.27) 및 하위법령 제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제도 홍보 등을 거쳐 '18.11월까지 약 220만명 아동수당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대상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 수석보좌관 회의 (2018.10.29)

보육과 돌봄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 강화(‘21년 공공보육 이용률 32%, ’22년까지 40% 달성 목표)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18.11.1.)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씩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 강화(‘21년 공공보육 이용률 32%, ’22년까지 40% 달성 목표)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 저출산 문제 해결 관련 대통령 공약 내용 및 이행 실적

□ 요청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및 부위원장 신설('17.9월)
- 집중 인구감소 지역 지원 확대*
 -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17~, '21년 6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 '21년 4,742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20~, '21년 88억원),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21.1월) 등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 공급(~'22)
 -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 ('18) 3만호, ('19) 4.3만호, ('20) 4.6만호
- 아동수당 도입('18.9월)*,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도입('22)
 - * ('18.9) 소득 하위 90%, 6세 미만 → ('19) 6세 미만 → ('20) 7세 미만
- 15세 이하 아동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17.10월)
 - *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기존) 10~20% → (변경) 5%

<일-가정 양립 등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기존 3일)로 확대('19.10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 * (기존) 통상임금의 40%, 월 100만원 상한 → (현재) 첫 3개월 : 80%, 월 150만원 상한 / 4개월 이후 : 50%, 월 120만원 상한 → ('22 계획) 기간 무관히 80%, 월 150만원 상한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100%, 월 200~300만원 상한
-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도입('19.10월)

-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무급) 시행('20.1월)
 -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일 5만원*10일, '20.3~)
- 가족돌봄휴직 사유대상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20.1월)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계적 확대
 - * ('18.7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1월) 50인~299인 사업장 → ('21.7월) 5인~49인 사업장

<안심보육 환경조성>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 * (공보육 이용률, '21.3월 기준) 35.3%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0월 기준) 29.8%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 * ('17) 0세 825만원, 1세 569만원, 2세 438만원 → ('21) 0세 101.2만원, 1세 71.3만원, 2세 54.7만원
 - ** 보육지원체계 개편(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구분 운영) 시범사업 실시 ('19.5월~'20.2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20.3월)
- 만 12세이하 맞벌이 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연 480시간 →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연 840시간

<임신·출산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 (기존) 44세 이하 법적 혼인부부 여성, 총 10회(인공 3회, 체외수정 7회) 지원 → (현재) 연령 무관히 사실혼 부부 여성, 총 17회(인공 5회, 체외수정 12회)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확대*
 -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18년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3개소(총 4개소) → '20년 권역센터 1개소 추가(총 5개소) → '21년 권역센터 1개소 추가 예정(총 6개소)
 -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총 50개소, 442병상 운영 중
 -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7) 12개소 → ('21) 20개소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 지급('19.7월)

29. 노무현 정부 이후 연도별 인구 자연감소 및 합계출산율

□ 연도별 인구 자연감소 및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출생아수(명)	사망자수(명)	자연증가건수(명)	합계출산율
2003	495,036	246,463	248,573	1.19
2004	476,958	246,220	230,738	1.16
2005	438,707	245,874	192,833	1.09
2006	451,759	244,162	207,597	1.13
2007	496,822	246,482	250,340	1.26
2008	465,892	246,113	219,779	1.19
2009	444,849	246,942	197,907	1.15
2010	470,171	255,405	214,766	1.23
2011	471,265	257,396	213,869	1.24
2012	484,550	267,221	217,329	1.30
2013	436,455	266,257	170,198	1.19
2014	435,435	267,692	167,743	1.21
2015	438,420	275,895	162,525	1.24
2016	406,243	280,827	125,416	1.17
2017	357,771	285,534	72,237	1.05
2018	326,822	298,820	28,002	0.98
2019	302,676	295,110	7,566	0.92
2020	272,337	304,948	-32,611	0.84

□ 2017~2021년 분기별 인구 자연감소 및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출생아수(명)	사망자수(명)	자연증가건수(명)	합계출산율
2017 1/4	98,529	73,016	25,513	1.17
2017 2/4	89,532	68,894	20,638	1.05
2017 3/4	89,638	67,713	21,925	1.05
2017 4/4	80,072	75,911	4,161	0.94
2018 1/4	89,760	81,803	7,957	1.08
2018 2/4	82,040	70,555	11,485	0.98
2018 3/4	80,480	70,729	9,751	0.96
2018 4/4	74,542	75,733	-1,191	0.89
2019 1/4	83,030	75,269	7,761	1.02
2019 2/4	75,395	71,645	3,750	0.92
2019 3/4	73,683	70,493	3,190	0.89
2019 4/4	70,568	77,703	-7,135	0.85
2020 1/4	73,595	79,703	-6,108	0.91
2020 2/4	68,263	72,658	-4,395	0.85
2020 3/4	68,900	73,630	-4,730	0.84
2020 4/4	61,579	78,957	-17,378	0.76
2021 1/4 p)	70,519	77,557	-7,039	0.88
2021 2/4 p)	66,398	75,049	-8,651	0.82

30.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정책 일체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임신·출산

① 비용 지원

구분	기 존	2017.5월 ~
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 개편('22)	제 도 도입('08) *일태아 50, 다태아 90만원	지원규모 확대('19) *일태아 60, 다태아 100만원 지원규모 확대('22) *일태아 100, 다태아 140만원
	없음	첫 만남 이용권 도입 (200만원, '22)
의료비 지원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면제('06.1월)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07.8월) * 성인의 70% 적용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상('08, 10%)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17) *10~20%→5%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19) *21~42%→5~20%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도입('15) *300만원 한도, 3개 질환	대상 질환 지속 확대('18~'19, 19개 질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입('06) * (대상) 만 44세 이하, 법률혼 * (지원) 체외수정 2회 지속 확대	사업 확대('19.7월) * (대상) 연령 무관 사실혼 포함 * (지원) 17회(인공5, 체외수정 12)

② 서비스 지원

구분	기 존	2017.5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 도입('06) 및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1)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없음	시범사업('20, 21개 보건소) 도입 및 전국 확대(~'24) *('21)50→('22)80→('23) 155→('24)256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없음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21, 8개소) 및 확대(~'24) *('22)50→('23)80→('24)155
분만취약지 임산부 재택의료	없음	시범사업('20.6~'22.12월) *51개 의료기관 참여 중

② 양육·돌봄

① 비용 지원

구분	기 존	2017.5월 ~
아동수당	없음	아동수당(월 10만원) 도입('18) *만 6세 미만·하위 90% 대상 확대('19~'22) *('19) 7세 → ('22) 8세
영아수당	없음	영아수당 도입('22) *22.1.1. 이후 출생아에 대해 만 0~1세, 월 30만원 지원 금액 확대(~'25) *('23)35→('24)40→('25)50만원

② 서비스 지원

구분	기존	2017.5월 ~
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개소('16.12월) : 2,859개소 *이용률('16.12월) : 12.1%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확대('21~'25) *개소('20.12월) : 4,958개소 *이용률('20.12월) : 20.4%
	국·공립유치원 확대 *개소('16) : 4,696개소 *이용률('16) : 24.2%	국·공립유치원 확대 *개소('20) : 4,976개소 *이용률('20) : 29.8%
시간제 보육	일시보육 시범사업('13) 시간제보육 본사업('15) *'15.12월 기준 233개	매년 200개반 확대('21~'23) *'20.12월 기준 681개
온종일돌봄 (초등돌봄)	없음	53만명까지 대상자 확대(~'22) *'20.12월 기준 42.1만명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도입('07) 영아종일제 도입('10) 아이돌봄지원법 제정('12)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14, 12→24개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 확대('17, 24→36개월) 연간 지원시간 확대('18~'21) *('18) 600 → ('19) 720 → ('21) 840시간

③ 일·생활 균형

① 출산 관련 휴가

구분	기존	2017.5월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제도 도입('01) *월 상한액 135만원, 30일 지원기간 확대('06) *월 상한액 135만원, 90일	월 상한액 인상('17~'20) * ('17) 150 → ('18) 160 → ('19) 180 → ('20) 200만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없음	제도 도입('19) *150만원(50만원*3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도입('08) *5일(유급 3일)	기간 확대('19) * 유급 10일(중소기업 5일 지원)
난임치료 휴가	없음	제도 도입('18.5월) *연 3일(1일 유급, 2일 무급)

② 육아 휴직

구분	기존	2017.5월 ~
육아휴직 급여	제 도 도입('01.11월) 정률제 도입('11) *정액 월 50만원→통상임금 40%, 월 상한 100만원	지원내용 확대 *(3개월) 80%, 150만원('17.9월) *(4개월~) 50%, 120만원('19.1월)→ 80%, 150만원('22~)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23~) *임금근로자→고보가입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 도입('14)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50만원, 1개월(→3개월, '16)	월 상한액 확대('18~'19) *('18) 200→('19) 25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상향('20) *첫3개월(100%,상한250), 4~6개월(80%,상한150), 7개월이후(50%,상한120)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도입('22) *만 0세 이하 자녀 대상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최대 월 2~3백만원(100%)

③ 가족돌봄휴가·휴직

구분	기존	2017.5월 ~
가족돌봄휴가	없음	제 도 도입('20.1) *연간 10일(한부모 20일) 코로나19 관련시 연간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20.3~'21.12) *1일(8시간) 5만원, 10일
가족돌봄휴직	제 도 도입('12.8)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 대상, 연간 90일	제 도 확대('19.10) *조부모, 손자녀 추가

④ 사업주 지원 제도

구분		기 존	2017.5월 ~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 휴직	기업규모별 차등지원('14) *우선지원대상 월 2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 기업규모별 차등지원('15) *우선지원대상 월 20만원, 대규모 월 5~10만원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확대 ('17.1월 월 20만원→월 30만원) 추가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 *(17.1월) 1호 월 10만원 →('21.1월) 2~3호 월 10만원 우선지원대상 첫 3개월 지원 확대('22, 월 30→월20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확대('14) * 우선지원대상 월 6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확대('19) *우선지원대상 월 80~120만원, 대규모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모별 차등지원('14) *우선지원대상 월 2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 기업규모별 차등지원('15) *우선지원대상 월 30만원, 대규모 월 20만원	기업규모별 차등지원('19) *우선지원대상 월 3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 추가 인센티브 도입('21.1월) *1~3호 월 10만원 추가
육아휴직자 인건비 세제 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 세액공제 *(19~205~10→(21~2215~30%

3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들과의 회의

□ 요청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 일시 : '17.12.26.
- 장소 : 청와대 본관
- 참석자 : 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 위촉위원 16명
- 회의내용 : 신규 위촉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과 새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공유 및 저출산 로드맵 논의
 -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 경주
 - (4대 추진방향)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①일·생활 균형, ②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③고용·주거·교육 개혁, ④모든 출생 존중
 - (최우선 과제) 특히, 일·생활 균형(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
- 회의결과 :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8년 우선 「저출산 대응 로드맵」 발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전면 재구조화 추진

<제4차 기본계획 논의를 위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

- 일시 : '20.11.30.
- 장소 : 청와대 본관
- 참석자 : 위원장, 위촉위원 2명
- 회의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1~'25) 주요 내용, 핵심과제 보고
- 회의결과 :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발표, 기본계획 적극 홍보 실시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일시 : '20.12.8.~14.
- 장소 : (서면심의)
- 참석자 : 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 위촉위원 16명
- 회의내용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1~'25),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성과평가 계획(안)
- 회의결과 :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필요, 추후 핵심과제 등에 대한 논의 진행 및 이행상황 점검할 것

3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 일체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저출산 관련 과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241,150	263,189	323,559	401,906	466,750

*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기준

33.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일체

□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포함한 공식행사 및 회의에서의 발언 전문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관련 및 대변인 논평 등 >

①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9. 10. 22.)

(전략)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후략)

② 2019 국민과의 대화(MBC, '19. 11. 19.)

(전략) 우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서민들은 전·월세 값이 함께 올라가게 되니까 주거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소유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건설 경기만큼 고용효과도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인달까, 경기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들을 받

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전·월세는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면이 아까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의 실수요에 기반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우선은 양도소득세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그게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수도권 30만 호,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용 주거 45만 호, 그다음에 청년주거용 75만 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공공임대를 얻었다는 그런 식의 좋은 체감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청년들의 경우는 아

직은 시작단계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로 높은데, 그러나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가보유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이죠. 기존의 주택 정책은 전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한 30% 정도,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도 많죠. 이분들은 옛날에 4인용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맞춤형 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75만 호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유세·양도세 문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후략)

③ 2020 신년사(청와대, '20. 1. 7.)

(전략)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④ 2020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20. 1. 14.)

(전략)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 기조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내려지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이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고 서민주거를 좀 더 보호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낮추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께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후략)

㉮ 2020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청와대, '20. 2. 27.)

(전략)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 배반입니다.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 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후략)

⑥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20. 7. 6.)

(전략)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략)

⑦ 21대 국회 개원 연설(국회, '20. 7. 16.)

(전략)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물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후략)

⑧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20. 8. 10.)

(전략)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후략)

㉠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청와대, '20. 9. 19.)

(전략)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략)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적임대주택 25만 호를 비롯해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75만 가구의 청년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후략)

Ⅹ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20. 10. 26.)

(전략)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후략)

Ⅺ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20. 10. 28.)

(전략) 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중략)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후략)

Ⅻ 2021년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21. 1. 18.)

(전략)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조금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

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고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

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늘어난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물론 그것이 다 주택을 꼭 구입하거나 임대해야 하거나 하는 주택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그리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략)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울 만큼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주택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 전에 이렇게 국민께 발표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청와대, '21. 2. 16.)

(전략)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 해내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께서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후략)

14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21. 3. 15.)

(전략)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입니다.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

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적폐청산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2·4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국무회의(청와대, '21. 3. 16.)

(전략)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16 수석보좌관회의(청와대, '21. 3. 22.)

(전략)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민을 위한 2·4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후략)

17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21. 3. 29.)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도 알 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국회도 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개혁에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습니다. 지표로도 확인되고,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 길이 멀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잘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때도 매우 아픕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18 취임 4주년 특별연설(청와대, '21. 5. 10.)

(전략)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후략)

19 현안 관련 대변인 브리핑(청와대, '21. 3. 9.)

(전략)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중략)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후략)

20 현안 관련 대변인 브리핑(청와대, '21. 10. 6.)

(전략)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후략)

- 현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12.16 대책, 7.10 대책, 8.4 공급방안, 2.4 공급대책 등 대출·세제·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월별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

☐ 요청하신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부작용 및 사망 사건 관련 청원글 현황

- 인과관계 증명 여부 관련 없이 청원 올라온 글 전체 통계
- 일시/제목/동의수/청와대 답변 및 조치 결과 명시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접종 등 관련 청원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 답변 요건인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은 없었지만, 청와대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고려해 20만 동의 미만인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5월 18일 △답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해당청원: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80,065명 동의, 2021년 4월 21일 게시) 등

○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인과성 여부 떠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백신이상반응 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원을 연계할 것 △국가보상제도 대상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 △인과성 판단은 전문가가 진행하고, 인과성 불명확 사례에는 1인당 1천만원 지원할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 국민청원 중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건 등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청원 목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6. 백신 접종 이후 월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

- 이상반응 항목별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 '21.10.10.기준)

구분	전체 이상반응 신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소계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
2월	148	148	0	0	0	0
3월	10,513	10,281	232	21	107	104
4월	5,507	5,197	310	53	66	191
5월	12,718	11,786	932	113	60	759
6월	62,522	59,461	3,061	174	194	2,693
7월	25,931	24,678	1,253	73	107	1,073
8월	63,317	61,244	2,073	100	285	1,688
9월	98,474	95,482	2,992	173	411	2,408
10월	26,480	25,774	706	42	57	607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음
2. 상기 통계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3.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 시 변경될 수 있음

37. 코로나 4단계 이후 단계별 방역수칙 일체

- ☐ 코로나 4단계 이후 방역수칙 관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8.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

- ☐ 병실 확보, 의료진 수급 등 방역당국 대응 역량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 의료지원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9.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방역 단계 일체

- ☐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방역단계 상황 관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및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0.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방역 수칙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 영업제한 조치 일체

- ☐ 방역수칙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 영업제한 조치 관련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1. 노무현 정부 이후 각 정부별 연도별 국가채무 누계 - 각 연도별 채무액 및 증가율 명시

- 정부별 국가채무 누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03년 이후 연도별 국가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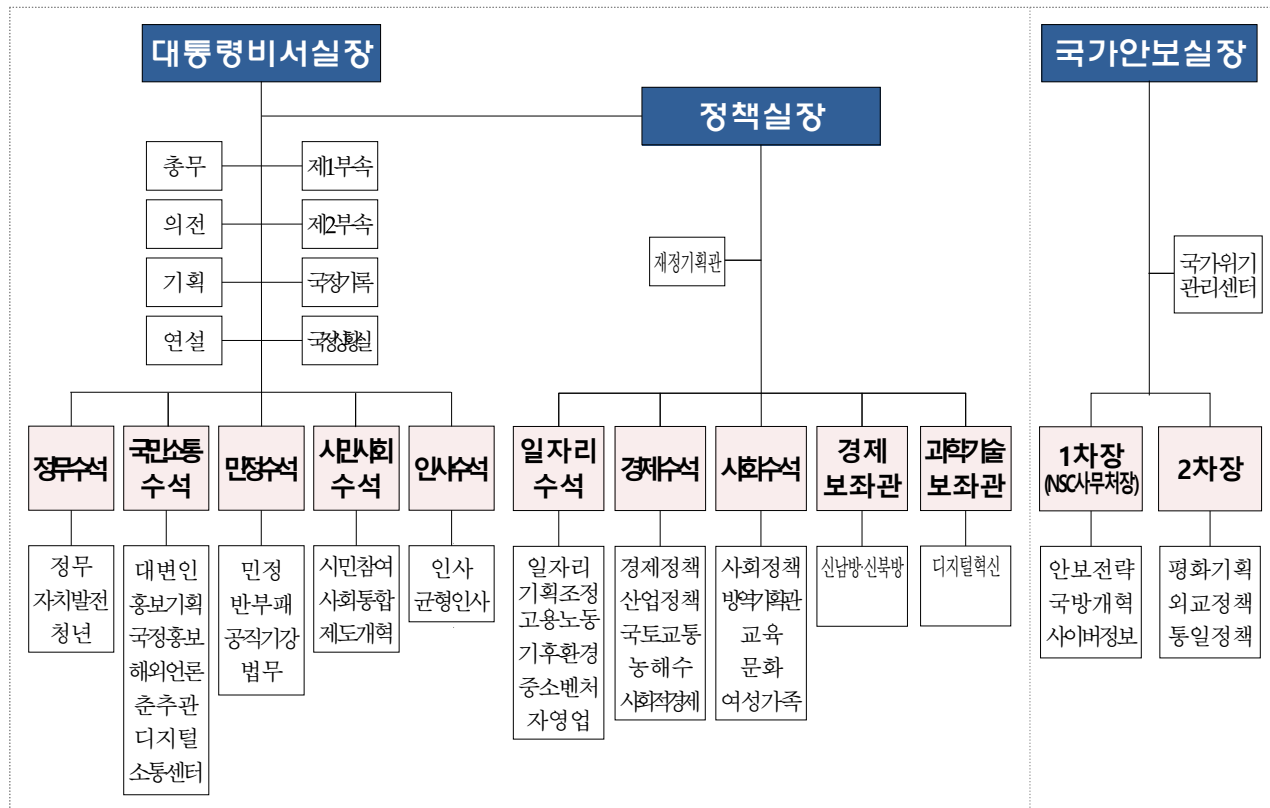
(조원, %)

	'03 (결산)	'04 (결산)	'05 (결산)	'06 (결산)	'07 (결산)	'08 (결산)	'09 (결산)	'10 (결산)	'11 (결산)	'12 (결산)
국가채무액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GDP대비 비중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30.8
	'13 (결산)	'14 (결산)	'15 (결산)	'16 (결산)	'17 (결산)	'18 (결산)	'19 (결산)	'20 (결산)	'21 (2차추경)	'22 (예산안)
국가채무액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65.3	1,068.3
GDP대비 비중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4.0	47.3	50.2

김 정 재 위 원

1. 조직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현직 각 실장, 각 수석 비서관 및 각 비서관등 간부들의 약력

□ 수석비서관 이상의 주요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인적사항
-----------	-------------------------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비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주)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 (주)LG CNS 부사장 	
이호승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철희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통문화대 특임교수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김진국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감사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부회장 ◦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외숙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명	직위	주요 경력	비고
임서정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안일환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이태한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남영숙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노르웨이대한민국 대사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통상부 FTA 제2교섭관 	
박수정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한국기체연구원 선임연구원 美 하버드대 부속병원 리서치펠로우 	
서훈	국가안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제3차장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서주석	제1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방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김형진	제2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외교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3. 청와대 부서별 업무 분장 및 급수별, 성별 근무 인원

□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및 현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업무분장표

(’21년 10월 현재)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반부패·사범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 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국토·교통, 농림축산 및 수산업, 해양,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방역정책·방역조치에 관한 업무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과학기술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원자력안전 분야에 관한 업무 ○ 방송통신산업·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 등 디지털혁신에 관한 업무

② 현원

(’21년 10월 현재)

구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현원	471	15	51	253	152

4. 청와대 현재 특별보좌관 현황 및 약력

-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구분	성명	약력	비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제16, 17대 국회의원	

5. 청와대 내 각 부서별 주요 중점 업무

□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1년 10월 현재)

구 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정책 조정에 관한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 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국토·교통, 농림축산 및 수산업, 해양,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방역정책·방역조치에 관한 업무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과학기술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원자력안전 분야에 관한 업무 ○ 방송통신산업·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 등 디지털혁신에 관한 업무

6.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사유

- ☐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파일

- ☐ 대통령비서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대응하고 있습니다.

8.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관 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총무비서관실 내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에 「Hot-Line」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내 성비위 발생 현황 및 징계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 감사결과보고서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3단계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p> <p>○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p> <p>○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p>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p>○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거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추진 중</p> <p>*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거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거레말 집필 등 추진</p> <p>○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p>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p>○ 국무회의, 국민경제지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p> <p>○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지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2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가’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방향을 제시(19.9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div>-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div><div>○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div><div>-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div><div>*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div><div>○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div></div>								
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	<div><div>○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div><div>○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div><div>○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div></div>								
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div><div>○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div><div>< 정책 연구 추진 현황 ></div><table><tr><th></th><th>연구과제명</th><th>연구책임자</th><th>기간</th></tr><tr><td>1</td><td>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td>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td>3~10월</td></tr></table></div>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			
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div>○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 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div> <div>-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div> <div>-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div> <div>-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div> <div>○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장’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div> <div>○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할 것</div>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 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 -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 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 *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 ○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 *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 *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약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1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 같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구분	감사 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감사 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감소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20년도 어린이날 행사 방식을 매년 해오던 「청와대 초청방식」에서 「온라인 영상 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한 4월 24일에서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임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p>※ 지적사항 없음</p>

1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자체감사 결과

-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대외비, 비공개 지정절차 및 기준 포함)

- ☐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국가기밀, 보안,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특수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퇴직자 현황(퇴직사유 상세 기재)

- ☐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퇴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직원 퇴직 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2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3	정책실장	김상조	
4	정책실장	김수현	
5	정책실장	장하성	
6	정무수석비서관	최재성	
7	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8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	
9	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10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만호	
11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12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영찬	
13	민정수석비서관	신현수	
14	민정수석비서관	김종호	
15	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16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17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제남	
18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19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용선	
20	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21	인사수석비서관	조현옥	
22	경제보좌관	박복영	
23	경제보좌관	주형철	
24	경제보좌관	김현철	
25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26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27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28	일자리수석비서관	정태호	
29	일자리수석비서관	반장식	

연번	직위	성명	비고
30	경제수석비서관	윤종원	
31	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	
32	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33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34	의전비서관	김종천	
35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36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37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38	정무비서관	배재정	
39	정무비서관	복기왕	
40	정무비서관	송인배	
41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	
42	자치발전비서관	유대영	
43	자치발전비서관	김우영	
44	자치분권비서관	나소열	
45	균형발전비서관	황태규	
46	청년비서관	김광진	
47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48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49	대변인	강민석	
50	대변인	고민정	
51	대변인	김의겸	
52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53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54	춘추관장	유송화	
55	춘추관장	권혁기	
56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	
57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58	민정비서관	이광철	
59	민정비서관	김영배	
60	민정비서관	백원우	

연번	직위	성명	비고
61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62	반부패비서관	이명신	
63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64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65	법무비서관	김영식	
66	법무비서관	김형연	
67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68	시민사회비서관	김금옥	
69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70	사회혁신비서관	김성진	
71	제도개혁비서관	신상엽	
72	제도개선비서관	문대림	
73	인사비서관	권용일	
74	인사비서관	김봉준	
75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	
76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77	재정기획관	박종규	
78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이준협	
79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80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81	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	
82	중소벤처비서관	주현	
83	경제정책비서관	이억원	
84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85	산업통상비서관	강성천	
86	농해수비서관	박영범	
87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88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89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90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91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	

연번	직위	성명	비고
92	사회정책비서관	민형배	
93	교육비서관	이광호	
94	교육비서관	김홍수	
95	문화비서관	전효관	
96	문화비서관	양현미	
97	문화비서관	남요원	
98	여성가족비서관	김유임	
99	여성가족비서관	홍승아	
100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101	여성가족비서관	은수미	
102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여한구	
103	디지털혁신비서관	조경식	
104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105	제1차장	김유근	
106	제1차장	이상철	
107	제2차장	김현종	
108	제2차장	남관표	
109	제2차장	김기정	
110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111	통일정책비서관	서호	

1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퇴직년도, 퇴직후 재취업 날짜, 재취업기관명, 재취업직급 등)

-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5급이상 별정직 직원 현황(소속 비서관실별/ 직급/성명/담당 업무/주요경력)

- ☐ 비서관이상 주요직위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세부적인 직원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 춘추관장(별)	김재준
○ 정책실장	이호승	○ 디지털소통센터장(별)	고주희
○ 국가안보실장	서 훈	○ 민정비서관(별)	이기현
○ 정무수석비서관	이철희	○ 반부패비서관(별)	이원구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박수현	○ 공직기강비서관	이남구
○ 민정수석비서관	김진국	○ 법무비서관(별)	서상범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방정균	○ 시민참여비서관(별)	강권찬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사회통합비서관(별)	조경호
○ 일자리수석비서관	임서정	○ 제도개혁비서관(별)	윤난실
○ 경제수석비서관	안일환	○ 인사비서관(별)	윤지훈
○ 사회수석비서관	이태한	○ 균형인사비서관(별)	김미경
○ 경제보좌관	남영숙	○ 재정기획관(별)	조영철
○ 과학기술보좌관	박수경	○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김정희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주석	○ 디지털혁신비서관	김정원
○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형진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별)	서영훈
○ 총무비서관	이정도	○ 고용노동비서관(별)	도재형
○ 의전비서관(별)	탁현민	○ 기후환경비서관(별)	박진섭
○ 제1부속비서관(별)	신지연	○ 중소벤처비서관(별)	이병헌
○ 제2부속비서관(별)	최상영	○ 자영업비서관(별)	인태연
○ 기획비서관(별)	오종식	○ 경제정책비서관	이형일
○ 연설비서관(별)	신동호	○ 산업정책비서관	이호준
○ 국정기록비서관(별)	조용우	○ 국토교통비서관	김이탁
○ 국정상황실장(별)	이진석	○ 농해수비서관(별)	정기수
○ 정무비서관(별)	김한규	○ 사회적경제비서관(별)	김기태
○ 자치발전비서관(별)	이신남	○ 사회정책비서관(별)	여준성
○ 청년비서관(별)	박성민	○ 방역기획관(별)	기모란
○ 대변인(별)	박경미	○ 교육비서관	이승복
○ 홍보기획비서관(별)	한정우	○ 문화비서관(별)	이경윤
○ 국정홍보비서관(별)	윤재관	○ 여성가족비서관(별)	정춘생
○ 해외언론비서관(별)	이지수		

1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8.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 결과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소관 징계위원회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중앙 징계위원회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19.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검찰 통보
및 처리 현황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및 경찰의 범죄 수사개시 통 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관련 수사개시
통보 15건, 결과통보 13건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 ☐ 21번의 경우, 20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5건	진행 중
헌법소송	2건	진행 중
민사소송	9건	진행 중

2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신규채용 현황(해당년도 어느부서 몇 급, 몇 명)

-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17. 9.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고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공채 및 특채 채용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임금현황

(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직급별 연봉, 직원 평균급여, 복리후생비, 성과급, 임직원 1인당 성과급, 성과급총액, 업무추진비)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지침, 기획재정부의 매년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급여,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별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급별 평균 임금 현황(2021년도)

(단위 : 원)

직급	평균 임금(매월)
장관급(실장)	11,317,417
차관급(수석·보좌관·차장)	10,991,167
고위공무원	8,332,665
3급	6,679,919
4급	5,910,885
5급	4,006,190
6급	2,850,172
7급	2,718,846
8급	2,285,650
9급	1,939,453

※ 평균임금 : 예산편성 단가(전년도 기관 임금의 지급별 평균액에 임금상승률을 반영) 기준

27. 취임이후 홍보 현황(홍보처/홍보비 등)
28. 취임이후 홍보물 일체(이미지, 영상물 일체)

-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세부계약 내역은 보안 사항에 해당하며,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 보호 등을 위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청하신 이미지, 영상물 등의 홍보물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용역 발주현황

- 연도별, 용역과제명, 용역기간, 입찰방식(경쟁/수의 등), 용역비, 용역수행자
- 용역계약체결내용 및 계약서 사본
- 동 기간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 동 기간 용역결과의 인용실적 등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 2021. 9월말까지 용역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현황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업무 내용	계약금액
'17.5월 ~ '21.9월	시설물유지관리, 정보화사업 등	32,619

30.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 현황
(관람신청 절차, 연도별 인원, 날짜별 참가단체 및 인원)

- ☐ 청와대 관람 신청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내국인은 관람희망 20일 전까지, 외국인은 3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연도별 관람 인원은 2017년 177,981명, 2018년 234,953명, 2019년 249,095명, 2020년 33,472명, 2021년은 9월말 현재 2,184명입니다.
- ☐ 관람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기준에 따라 모두 파기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취임 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간행물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발간간행물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목	비 고
함께, 보다(도록)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展 ‘어서 와, 봄’ (도록)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I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II	
신남방정책, 3년의 여정	

32.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출장비 지급 관련규정, 출장일자 및 목적, 출장 보고서 제출유무 표시)

☐ 대통령비서실의 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강연 일시, 장소, 실제 강연시간 및 강연료 받드시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소속직원의 직무 외 영리수입현황
- 연도별, 직위/직책, 지급처, 내용(일시, 장소, 시간 포함), 금액 등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겸직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1.10월 현재, 겸직 중인 공무원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 2021. 9월말까지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현황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업무 내용	경쟁입찰	수의계약금액	총계약금액
'17.5월 ~ '21.9월	물품 · 용역 · 시설공사계약	44,500	23,247	67,747

3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 연도별, 시군구별, 사회공헌활동내용, 지원금액 등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0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내역은 방문시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관련

-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내역(카드별 사용자표기(부서명포함), 카드별 사용금액)
-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총액 및 유형별 사용현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카드번호, 사용자(부서명포함), 사용일시(시간, 분, 명기), 사용금액, 가맹점명, 업종, 사용목적 및 사유)
-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지침 및 사용절차, 조건
-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내역(최근 5년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여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현황(현 정부 출범 이후)

(단위: 백만원)

2017년 5월 이후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9월말)
3,036	4,579	4,987	5,166	2,592

38.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전용내역서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용 증		전용 감		전용 사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2017	해당사항 없음						
2018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수용비(210-01)	140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연구비(260-01)		△140	업무용택시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22	기본경비(200) - 일반수용비(210-01)		△22	국내여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55	기본경비 (1011-200)	복리후생비 (210-12)	△45	국내여비 부족	
				일반용역비 (210-14)	△10		
2019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자산취득비(430-01)		361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공사비(420-03)		△361	위기관리시설 유지보수 재원 마련
	기본경비(200)	국내여비 (220-01)	114	기본경비 (1011-200)	유류비 (210-08)	△130	국내·외 여비 부족
		국외여비 (220-02)	3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	
2020	기본경비(200) - 직책수행경비(250-02)		90	기본경비(200) -임차료(210-07)		△90	직책급 지급 대상 및 상위 직급 증가로 인한 직책수행경비 재원 마련

39.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불용내역서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불용액	불용 사유	불용액	불용 사유	불용액	불용 사유	불용액	불용 사유
합계	4,332	—	3,667	—	3,675	—	2,893	—
인건비	1,315	집행잔액	758	집행잔액	2,064	집행잔액	140	집행잔액
기본경비	3,017	집행잔액 등	1,262	집행잔액	511	집행잔액	1,365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5,986	의도적 절감 등	140	집행잔액	75	집행잔액	135	집행잔액
국정운영관리	1,522	집행잔액	741	집행잔액 낙찰차액	395	집행잔액	614	관람객 감소
시설관리 및 개선	577	집행잔액 낙찰차액	272	집행잔액 낙찰차액	306	집행잔액 낙찰차액	149	집행잔액 낙찰차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	집행잔액	87	집행잔액	4	집행잔액	5	집행잔액
정보화추진	466	집행잔액 낙찰차액	382	집행잔액 낙찰차액	277	집행잔액 낙찰차액	288	낙찰차액
국가안보실 운영	43	집행잔액	23	집행잔액	44	집행잔액 낙찰차액	16	집행잔액 낙찰차액

4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업별·목별 이월내역서

☐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각 부서별,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별등으로 구분)

☐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2021년(9월말)	8,685	-	8,685	6,760
2020년	9,650	△804	8,846	8,846
2019년	9,650	-	9,650	9,650
2018년	9,650	-	9,650	9,650
2017년(5월이후)	12,488	-	12,488	5,85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 집행 세부 내역이 대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자체지침 사본 1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관 자체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 동 지침에는 국정수행 활동의 종류, 내용 등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2018년 이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 사본 1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과 「특수활동비 자체집행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월별 집행내용과 유형별 세부집행결과를 포함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정수행의 기밀성 등으로 세부지출 내역을 바로 공개하지 못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기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제2부속실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금액/구입물품명 및 금액내역)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에 제2부속실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4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TF팀 운영 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직제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 취임이후 연도별 각부서별 대통령 지시사항

-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표창 발급 내역

- ☐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포상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연도별 국민청원 등록 현황

- 2017년 8월 19일부터 2021년 9월31일까지 게시된 청원은 총 105만 6,186건입니다. 청원 동의수는 2억 1,622만 2,506건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청원수	77,753	406,122	227,894	240,316	104,101	1,056,186
청원 동의수	7,988,016	49,654,423	42,598,218	79,142,116	36,839,733	216,222,506

49. 청와대 및 정부에서 답변한 국민청원 관련 청원명, 게시일자, 내용, 참여인원, 답변일, 답변내용 등

□ 2017년 8월 19일부터 현재(2021년 10월 13일 기준)까지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264건이며, 이 중 답변 기간이 남아있는 6건을 제외한 258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 20만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 리스트 및 답변 여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만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 게시 및 답변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답변된 청원]

50. 국민청원 비공개, 삭제 기준

-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9년 4월 개편 이후, 사전동의 100명 요건을 갖춘 게시글에 대해 국민청원 작성요건에 따라 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청원 작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국민청원 작성요건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청원 게시판은 2021년 7월 12일(예비후보등록시작일)부터 ‘대통령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기간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 게시글은 비공개하고, 20만 이상 동의 청원은 선거일 이후로 답변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은 지난 7월 12일부터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총선, 2021년 재보궐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정책입니다.

5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 자문위원회 이름, 위원회구성 시점, 위원회구성이유 위원현황, 회의개최실적, 의결 안전현황, 비용지급 현황

-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은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입장

- ☐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따로 표명할 입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3. 2017년 12월 6일 2018년 초에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후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보고 내용 원본과 대통령 비서실 답변 원본
54. 2018년 3월 15일 산업부가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원본
55. 2018년 4월 2일, 3일, 4일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원본
56. 2018년 5월 23일 경 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원본
57.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파일 일체
58. 월성 1호기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
59.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서 원본일체
60.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문서 원본일체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현황

□ 취임 후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는 2021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총 138회 개최되었음을 밝힙니다.

<참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수보회의 개최 현황

일자	회의명	일자	회의명
2017-05-25	수석보좌관 회의	2018-03-12	수석보좌관 회의
2017-05-29	수석보좌관 회의	2018-04-02	수석보좌관 회의
2017-06-01	수석보좌관 회의	2018-04-09	수석보좌관회의
2017-06-05	수석보좌관 회의	2018-04-16	수석보좌관 회의
2017-06-08	수석보좌관 회의	2018-04-23	수석보좌관 회의
2017-06-15	수석보좌관 회의	2018-04-30	수석보좌관 회의
2017-06-22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14	수석보좌관 회의
2017-06-26	수석보좌관 회의	2018-05-28	수석보좌관 회의
2017-07-13	수석보좌관 회의	2018-06-11	수석보좌관 회의
2017-07-17	수석보좌관 회의	2018-06-18	수석보좌관 회의
2017-07-20	수석보좌관 회의	2018-07-02	수석보좌관 회의
2017-07-27	수석보좌관 회의	2018-07-16	수석보좌관 회의
2017-08-07	수석보좌관 회의	2018-07-23	수석보좌관 회의
2017-08-10	수석보좌관 회의	2018-08-06	수석보좌관 회의
2017-08-14	수석보좌관 회의	2018-08-13	수석보좌관 회의
2017-08-24	수석보좌관 회의	2018-08-20	수석보좌관 회의
2017-09-04	수석보좌관 회의	2018-08-27	수석보좌관 회의
2017-09-11	수석보좌관 회의	2018-09-03	수석보좌관 회의
2017-09-25	수석보좌관 회의	2018-09-17	수석보좌관 회의
2017-10-10	수석보좌관 회의	2018-10-01	수석보좌관 회의
2017-10-16	수석보좌관 회의	2018-10-10	수석보좌관 회의
2017-10-23	수석보좌관 회의	2018-10-29	수석보좌관 회의
2017-10-30	수석보좌관 회의	2018-12-10	수석보좌관 회의
2017-11-20	수석보좌관 회의	2018-12-17	수석보좌관 회의
2017-12-04	수석보좌관 회의	2018-12-31	수석보좌관회의
2017-12-11	수석보좌관 회의	2019-01-14	수석보좌관 회의
2017-12-18	수석보좌관 회의	2019-01-21	수석보좌관 회의
2018-01-08	수석보좌관 회의	2019-01-28	수석보좌관회의
2018-01-15	수석보좌관 회의	2019-02-11	수석보좌관회의
2018-01-22	수석보좌관 회의	2019-02-18	수석보좌관회의
2018-01-26	수석보좌관 회의	2019-02-25	수석보좌관회의

일자	회의명	일자	회의명
2018-01-29	수석보좌관 회의	2019-03-25	수석보좌관회의
2018-02-05	수석보좌관 회의	2019-04-01	수석보좌관 회의
2018-02-19	수석보좌관 회의	2019-04-15	수석보좌관회의
2018-02-26	수석보좌관 회의	2019-04-29	수석보좌관회의
2018-03-05	수석보좌관 회의	2019-05-13	수석보좌관회의
2019-05-20	수석보좌관회의	2020-08-31	수석·보좌관회의
2019-06-03	수석보좌관회의	2020-09-07	수석·보좌관회의
2019-07-08	수석보좌관회의	2020-09-14	수석·보좌관회의
2019-07-15	수석보좌관회의	2020-09-28	수석·보좌관회의
2019-07-22	수석보좌관회의	2020-10-05	수석·보좌관회의
2019-08-05	수석보좌관 회의	2020-10-12	수석·보좌관회의
2019-08-12	수석보좌관 회의	2020-10-19	수석·보좌관회의
2019-08-19	수석보좌관 회의	2020-10-26	수석·보좌관회의
2019-09-16	수석보좌관 회의	2020-11-02	수석·보좌관회의
2019-10-07	수석보좌관회의	2020-11-09	수석·보좌관회의
2019-10-14	수석·보좌관회의	2020-11-30	수석·보좌관회의
2019-11-11	수석·보좌관회의	2020-12-07	수석·보좌관회의
2019-12-02	수석·보좌관회의	2020-12-14	수석·보좌관회의
2019-12-16	수석·보좌관회의	2020-12-28	수석·보좌관회의
2019-12-30	수석·보좌관회의	2021-01-11	수석·보좌관회의
2020-01-20	수석보좌관 회의	2021-02-01	수석·보좌관회의
2020-02-03	수석보좌관 회의	2021-02-08	수석·보좌관회의
2020-02-10	수석·보좌관회의	2021-02-15	수석·보좌관회의
2020-02-24	수석·보좌관회의	2021-02-22	수석·보좌관회의
2020-03-09	수석보좌관 회의	2021-03-15	수석·보좌관회의
2020-04-13	수석보좌관회의	2021-03-22	수석·보좌관회의
2020-04-20	수석보좌관회의	2021-04-05	수석·보좌관회의
2020-04-27	수석·보좌관 회의	2021-04-19	수석·보좌관회의
2020-05-04	수석·보좌관회의	2021-04-26	수석·보좌관회의
2020-05-11	수석보좌관회의	2021-05-17	수석·보좌관회의
2020-06-08	수석·보좌관회의	2021-07-05	수석·보좌관회의
2020-06-15	수석·보좌관회의	2021-07-19	수석보좌관회의
2020-06-29	수석·보좌관회의	2021-07-26	수석보좌관회의
2020-07-06	수석·보좌관회의	2021-08-02	수석보좌관회의
2020-07-20	수석·보좌관 회의	2021-08-09	수석보좌관회의
2020-07-27	수석·보좌관 회의	2021-08-30	수석보좌관회의
2020-08-10	수석·보좌관회의	2021-09-06	수석보좌관회의
2020-08-24	수석·보좌관회의	2021-09-27	수석보좌관회의

62. 취임이후 NSC 개최현황(전체회위, 상임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NSC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대통령이 주재하며, 헌법(제91조)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 및 제3조)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구성됩니다.

○ (NSC 상임위원회)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 규정 제8조 및 제9조)

-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구성됩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 규정 제8조 4항)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 10. 20.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래와 같이 14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일자	안 건
'17.5.14.	北 미사일 발사
'17.6.8.	北 미사일 발사
'17.7.4.	北 미사일 발사
'17.7.29.	北 미사일 발사
'17.9.3.	北 핵실험
'17.9.15.	北 미사일 발사
'17.9.24.	北 주요 동향
'17.11.29.	北 미사일 발사
'18.5.25.	남북관계 현안
'18.6.14.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9.3.4.	2.28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9.4.5.	강원 고성 산불 상황
'19.4.5.	강원 고성 산불 상황
'21.1.21.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63.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현황

-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예산으로 집행된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사용내역 점검

-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금액

- ☐ 직원 가족 등의 사망, 결혼, 출산, 생일 등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내역은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있는 감찰반 관련

- 감찰반장 및 감찰반 구성원 명단 및 원 소속기관
- 동 직제규정에 따른 감찰업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친족범위
- 감찰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한 총 건수 및 건별 세부내역

☐ 대통령비서실 내부 직제 및 업무의 상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보안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주관한 사업의 용역계약 체결 내역
 -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목적, 참석자, 예산, 용역업체, 용역
 계약종류(수의·입찰 등), 용역계약서 등

- 의전비서관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계약은 성격상 대통령의 일정, 국정 수행 활동과 연계되므로 공개할 경우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우며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는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7. 2019년 3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68. 2020년 3월, 8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산공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go.kr>)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9.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황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사용금액 등

□ 현 정부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2021년(9월말)	6,475	-	6,745	4,333
2020년	7,194	△504	6,690	6,374
2019년	7,194	-	7,194	7,111
2018년	7,194	-	7,194	7,109
2017년(5월이후)	7,194	-	7,194	4,50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 사용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기별 연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취임 이후 연도별 각 부처별 주요 업무 지시

-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 - 국정과제 달성 평가 현황

-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 등은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이재명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에 과다 수익이 돌아간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입장

□ 해당 주장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으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부 출범 초부터 주거복지로드맵('17), 3기 신도시('18), 2.4대책 등을 통해 205만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으로 공급할 전망입니다.

* 입주물량(과거 10년평균 → '21~'30년) 전국 46.9 → 56.3, 수도권 23.4 → 31.4만호

○ 공공임대주택도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연평균 14만호)으로 공급하고, 선진국 수준의 임대 재고를 확충하였습니다.

* 장기 공공임대 재고량 및 비율 : '17년 135만호(6.7%) → '20년 170만호(8.0%, 추정)

□ 주택공급과 더불어 금리인상, 가계부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9.3주) 0.40 (9.4) 0.36 (9.5) 0.34 (10.1) 0.34
(10.2) 0.32 (10.3) 0.30

□ 앞으로도 2.4대책 등 전국 205만호(수도권 18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 부처별 파견공무원현황(부처명, 이름, 소속, 직급, 파견사유)

-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정의 효율적 보좌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관련 (청와대 근무전 근무 정부부처명, 직급, 특공받은 현황, 처분 현황 등)

- ☐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해당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 오 경 위 원

1. 2020년~2021년 8월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 이외 사항(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포함)은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5년간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법률안/제도개선 등 요청/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현황
- 이행률, 미이행시 이행계획 표기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현황은 소관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2년간(2020~2021.8월) 발간된 연구용역보고서 리스트 및 각 보고서 사본

□ 최근 2년간 청와대가 발주하여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하기로 한 보고서(5건)*는 별첨합니다.

*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정과 과제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2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38.8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39.0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25.5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유형 및 대응방향	21.5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정과 과제	19.0
	임대차3법 등 부동산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 기반 연구	28.5
	러중관계 현황 및 전망	8.0
	미 인도태평양전략 下 군사력 운용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8.6
	한반도정책 관련 대미 정책소통 추진방향	7.9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7.9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용을 위한 전략	7.7
	코로나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 전망	8.0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7.9
2021	주요국의 대중 의존도 및 대중정책 상관관계	7.8
	국제질서 재조정기 한국 정부 대외전략과 대북정책 :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5.0
	바이든 신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5.0

5. 최근 2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중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

8. 최근 2년간 추진사업 중 대내외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업과 사업개요, 주요 비판 내용, 향후 시정 계획 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최근 2년간 실시한 설문,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결과

☐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귀 기관의 규제혁신 성과

- 정부는 8,600여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개선

규제샌드박스	6개 분야(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 승인
규제혁신 로드맵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203건 정비
네거티브 전환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전환

2. 핵심규제 개선 : 7,328건 개선

기업활동	신산업 676건 개선,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	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3.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창출 지원

제도구축	적극행정 제도(면책, 적극행정촉,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구축·활용
국정성과 지원	코로나19 대응, 민생, 규제혁신 등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등 1,295건

- ① 먼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 등 지속적으로 제도도 보완 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총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원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도 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혁신기술**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 **갈등해결**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 : 모바일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버스,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₂자원화),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 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 전남(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헴프,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가사서비스 플랫폼 등 106건

【주요 사례】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small>복지부</small>	
내용	의료법 제34조에 의거 의료인·환자간 비대면 진료 불가 →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 조건으로 임시허가 (‘20.6)
효과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172건 진료 (‘21.7)
● 모바일 운전면허증 <small>경찰청</small>	
내용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효력에 관련 규정 부재 →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 (‘19.9)
효과	200만명 이상이 가입,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등에 활용
●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small>산업부·환경부</small>	
내용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절차 부재 →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고 희유금속 추출에 재활용하는 실증특례 (‘19.7)
효과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및 5,518억 투자유치

②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국토부

내용 3단계(Lv3)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출시 불가
→ 기능안전 기준, 보험규정 등 완비('20.10)

효과 국내·외 기업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③ 법령 등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확대와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 법령('18.1, '18.10, '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리스트 식약처

내용 의료기기 변경허가는 기업의 자율적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사전허가 필요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기업 자율변경 허용('19.2)

효과 허가기간 42일 단축, 허가비용 연간 59백만원 절감 효과

2. 핵심규제 개선 : 기업활동 · 국민생활 규제 집중정비 7,328건

① 신산업 출시를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 (DNA) 가명정보 도입,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
(비대면산업)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
(바이오의료) DTC(소비자 대상 직접) 검사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주요 사례】

● 가명정보 도입 개인정보위

내용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불가 → 가명정보 활용·제공·결합 허용('20.8)
효과 데이터 분석(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예측 등) 및 **新서비스 개발**(신규 대출상품 출시 등) 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복지부

내용 원격기기를 활용한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원격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보지 않고 **정식허용**('20.3)
효과 새로운 서비스 확대 및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20.5)

○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입지, 경쟁제한* 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창업)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
(중기·소상공인) 건설기계 대여 사무실 공유, 음료 제조방식 다양화 등 140건('19.10)
(공장입지) 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
(경쟁제한) 소규모 맥주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17~'20) 등

【주요 사례】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내용 승합차만 캠핑카 튜닝 제작 가능 → **승용·화물 특수차량도 캠핑카 튜닝 허용**('20.2)
효과 튜닝 제작·정비업체수 **34% 증가**('19 3,053개 → '21.7 4,085개) 및 신규 튜닝 대수 **182% 증가**('19 2,195대 → '21.7 6,184대)

●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산업부

내용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특정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저조 → 광양국가산단 등 **개별산단 입주애로 해소**('21.6) 및 **네거티브존 허용규모 등 개선방안 마련**
효과 **광양산단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약 **2,700억원 투자 전망**

②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온라인행정)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 192건('18, '21)
 (지역제한) 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 확대 등 50건('19.4)
 (입지불편) 학교기숙사 건축면적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등 38건('18.4)
 (규제신문고) 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신약 허용 등 1,265건 등

【주요 사례】

● 입국장 면세점 허용 기재부

내용 입국장 면세점 불허 → 여행객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개소('19.5), 담배 등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등 확대 예정
효과 43만명 이용, 매출액 480억원('21.8)

●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행안부

내용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18.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효과 온라인 출생신고 활용 확대('18년 3,807건 → '20년 14,677건)

-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전남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관 시설 설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 등 191건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의무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주요 사례】

●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울산시→산업부

내용 사용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철거 의무 →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용 허용('22.6)
효과 해상플랫폼 철거비용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등 1천여억원 절감

● 법령보다 과도한 과태료 부과 개선 군산시·강남구 조례 등

내용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근거 없이 부과(예: 법령은 산림 근처 소각시 50만원 과태료 → 조례는 70만원)
효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 수정

3. **법정부 적극행정 확산** : 면책·인센티브 등 제도구축 및 핵심정책 성과 지원

□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 등의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과 사전컨설팅을 통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 (기존) 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 →
(완화) 사적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토 현안자문** : ('19) 42건 → ('20) 532건 → ('21.상반기) 192건

• **사전컨설팅** : ('19) 1,184건 → ('20) 1,505건 → ('21.상반기) 710건

• **면책신청 / 인정** : ('18) 151건/110건 → ('19) 372건/251건 → ('20) 318건/237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20년부터 우수직원을 매년 2,000여명 선발하고, 50% 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운영규정**」 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등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 등

□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등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민생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 등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 <small>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small>	
내용	코로나19 검사준비·소독·환복 등에 상당시간 소요 →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방식 개발로 빠른검사 시행('20.2~)
효과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 이내), 해외보도 및 벤치마킹
●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small>질병청·식약처</small>	
내용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통상 80일 소요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20.1)
효과	조기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및 해외수출(22.7억달러)에 기여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small>금융위</small>	
내용	연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1천억원 소멸 → 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 협업으로 카드포인트 현금입금 서비스 개시('21.1)
효과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원 환급('21.6)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 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제안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철클린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한편, 판로 확대('21.9) 등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 게임 섯다운제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등
-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 현장 일선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는 규제혁신 플랫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정부는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먹거리 육성 및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사회 구조전환 대비에 만전

① (한국판 뉴딜) 코로나19·탄소중립으로 촉발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20.7, '21.7)

☞ 디지털 뉴딜(D.N.A 등), 그린 뉴딜(탄소중립 인프라 등)에 충분한 마중물 재정투자를 선도하여 디지털·그린 전환 토대 마련

② (벤처·창업) 제2벤처붐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활성화 제도 개선 등 추진

☞ '20년 벤처투자(4.3조원) 및 창업기업 수(148.4만개) 역대 최대실적 기록,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역대 최대인 15개 기록('21.7월)

③ (BIG3) 차세대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BIG3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지원('20.12월~)

☞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20), 반도체 설비투자 대폭 확대 등 성과 창출

④ (신산업)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큰 분야 육성 지원

□ 혁신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 미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기반 구축

○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혁신역량 및 성과를 매우 높이 평가 →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 확인

* (WIPO 혁신지수)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1년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132개국 중 세계 5위(아시아 최초), 전년대비 5단계 상승('21.9)

* (블룸버그 혁신지수) '21년 한국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90.49점, 세계 1위('21.2)

12. 현재 귀 기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개

- ☐ 요청하신 사항은 운영위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 최근 3년간 기관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결과 일체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 주 혜 위 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3단계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p>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취해 나가겠음.
<p>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국민경제지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지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지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인)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 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가'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방향을 제시(19.9월)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정책 연구 추진 현황 ></div> <table><tr><th></th><th>연구과제명</th><th>연구책임자</th><th>기간</th></tr><tr><td>1</td><td>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td>박경하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td><td>3~10월</td></tr><tr><td>2</td><td>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td>배재윤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td><td>3~10월</td></tr><tr><td>3</td><td>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td><td>3~11월</td></tr><tr><td>4</td><td>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td><td>3~11월</td></tr></table> <div>○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div>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3~11월																		
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div>○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 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div> <div>-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div> <div>-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div> <div>-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div> <div>○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장’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할 것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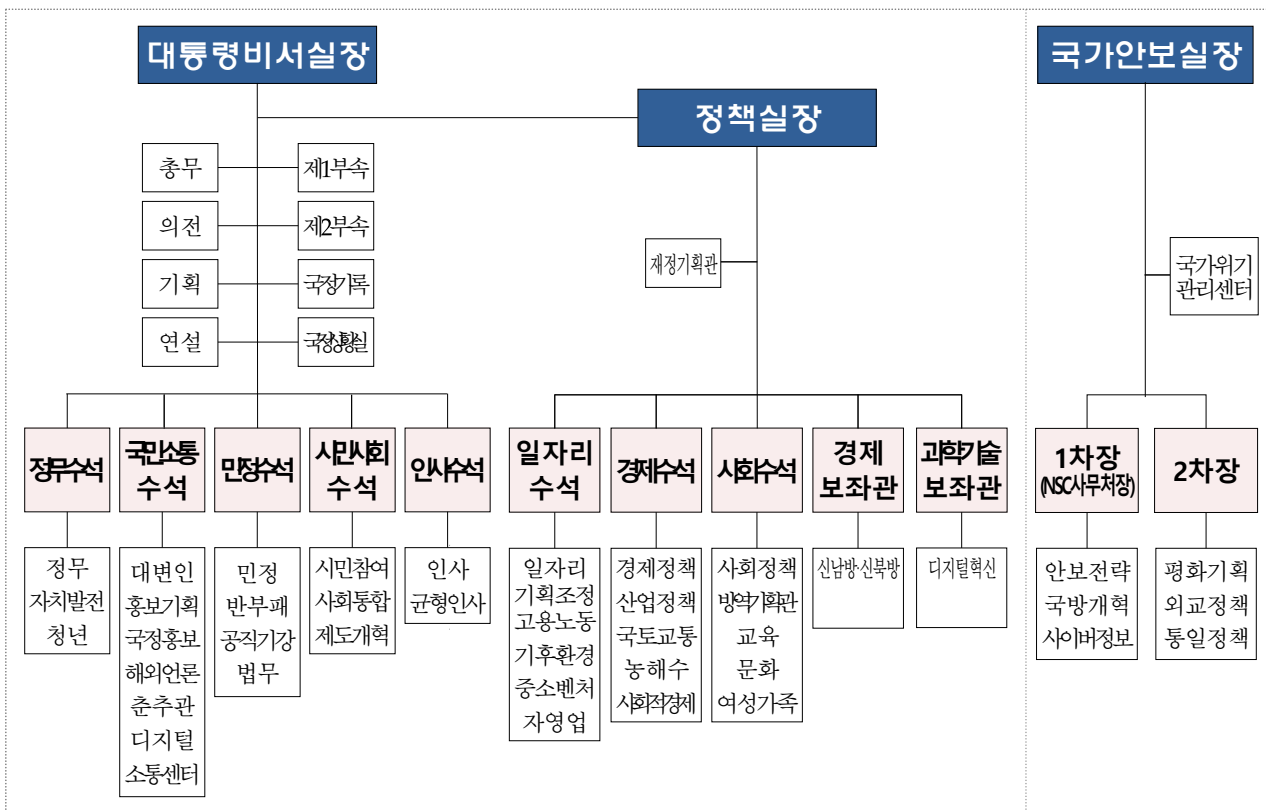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 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p> <p>-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p> <p>*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p> <p>○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 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p> <p>*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비우체)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p> <p>○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	<p>○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旣 발표</p> <p>*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p> <p>*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p> <p>○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p> <p>-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p> <p>○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p>
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2. 최근 3년간 직제개편 등 조직 및 인사 변동사항

□ 대통령비서실은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재편 한 바 있습니다.

○ 조직도('21.10월 현재)



□ 비서관이상 주요직위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주요 직위자를 제외한 세부적인 직원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 반부패비서관	이원구
○ 정책실장	이호승	○ 공직기강비서관	이남구
○ 국가안보실장	서 훈	○ 법무비서관	서상범
○ 정무수석비서관	이철희	○ 시민참여비서관	강권찬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박수현	○ 사회통합비서관	조경호
○ 민정수석비서관	김진국	○ 제도개혁비서관	윤난실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방정균	○ 인사비서관	윤지훈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균형인사비서관	김미경
○ 일자리수석비서관	임서정	○ 재정기획관	조영철
○ 경제수석비서관	안일환	○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김정희
○ 사회수석비서관	이태한	○ 디지털혁신비서관	김정원
○ 경제보좌관	남영숙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서영훈
○ 과학기술보좌관	박수경	○ 고용노동비서관	도재형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주석	○ 기후환경비서관	박진섭
○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형진	○ 중소벤처비서관	이병현
○ 총무비서관	이정도	○ 자영업비서관	인태연
○ 의전비서관	탁현민	○ 경제정책비서관	이형일
○ 제1부속비서관	신지연	○ 산업정책비서관	이호준
○ 제2부속비서관	최상영	○ 국토교통비서관	김이탁
○ 기획비서관	오종식	○ 농해수비서관	정기수
○ 연설비서관	신동호	○ 사회적경제비서관	김기태
○ 국정기록비서관	조용우	○ 사회정책비서관	여준성
○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 방역기획관	기모란
○ 정무비서관	김한규	○ 교육비서관	이승복
○ 자치발전비서관	이신남	○ 문화비서관	이경윤
○ 청년비서관	박성민	○ 여성가족비서관	정춘생
○ 대변인	박경미	○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이성열
○ 홍보기획비서관	한정우	○ 안보전략비서관	장용석
○ 국정홍보비서관	윤재관	○ 국방개혁비서관	강신철
○ 해외언론비서관	이지수	○ 사이버정보비서관	박상규
○ 춘추관장	김재준	○ 평화기획비서관	김준구
○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	○ 외교정책비서관	김용현
○ 민정비서관	이기현	○ 통일정책비서관	김창수

3.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정, 개정 내용 및 사유

☐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 이외 사항(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포함)은 해당사항 없음

5.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자체감사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 (제9조 제1항 제5호)
- ※ 감사 및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 (제16조 제1항 단서)

6. 최근 3년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의 기소, 수사, 판결, 내부 자체 징계 현황

□ 2018. 1. 1.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관련 수사개시 통보 14건, 결과통보 12건이 있었으며,

□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부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소관 징계위원회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중앙 징계위원회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전임 정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최근 3년간 전 직원 국내 출장 현황 및 내역

8.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및 국외여비 지급 내역

- ☐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신문고 관련 내규, 규칙 등 내부 심사 규정 일체

- ☐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국민신문고 관련 내부 심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내역 및 결과, 재취업 현황

-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 경 호 위 원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내역 일체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문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3단계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갔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 '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거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추진 중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거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거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국민경제지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지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지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 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가'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li style="padding-left: 40px;">*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정책 연구 추진 현황 ></div> <table><tr><th></th><th>연구과제명</th><th>연구책임자</th><th>기간</th></tr><tr><td>1</td><td>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td>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td>3~10월</td></tr><tr><td>2</td><td>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td>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td>3~10월</td></tr><tr><td>3</td><td>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td>3~11월</td></tr><tr><td>4</td><td>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td>3~11월</td></tr></table> <div>○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div>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div>○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 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div> <div>-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div> <div>-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div> <div>-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div> <div>○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장’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할 것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가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 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p> <p>-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p> <p>*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p> <p>○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 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p> <p>*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p> <p>○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할 것	<p>○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旣 발표</p> <p>*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p> <p>*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p> <p>○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p> <p>-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p> <p>○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p>
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2. 2017년부터 최근까지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 이외 사항(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포함)은 해당사항 없음

3.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및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 (제16조 제1항 단서)

4. 2017년부터 최근까지 비서실 직원의 비위 현황 및 조치내역 일체, 징계위원회 소집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 (음주운전,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는 별도로 표기)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소관 징계위원회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중앙 징계위원회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5. 현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규정에 대한 상세내역

□ 인사검증 관련 사항들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확인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6. 현정부 출범 이후, 자체 혹은 외부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역 일체
(일자, 여론조사 목적, 주요 결과, 조사 비용 등 상세내역)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여론조사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정부 출범 이후 ~ 2021. 9월말까지 전체 여론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론조사 현황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여론조사 내역	계약금액
’17.5월 ~ ’21.9월	정기 국정 지표조사 등	5,667

7.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간행물 목록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발간간행물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목	비 고
함께, 보다(도록)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展 ‘어서 와, 봄’ (도록)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I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ed Speeches III	
신남방정책, 3년의 여정	

8. 현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 채용한 별정직행정관, 행정요원 목록(연도별, 비서관실별, 직급 등 상세내역)과 퇴직 이후 재취업한 내역(재취업 기관명, 직급) 일체

-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9.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민원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 청와대에서 수취한 편지 포함
- 연도별 국민청원수, 답변 수 등 내역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2017년 8월 19일부터 2021년 9월31일까지 게시된 청원은 총 105만 6,186건입니다. 청원 동의수는 2억 1,622만 2,506건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청원수	77,753	406,122	227,894	240,316	104,101	1,056,186
청원 동의수	7,988,016	49,654,423	42,598,218	79,142,116	36,839,733	216,222,506

- 2017년 8월 19일부터 현재(2021년 10월 13일 기준)까지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264건이며, 이 중 답변 기간이 남아있는 6건을 제외한 258건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 20만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 리스트 및 답변 여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만 이상 동의한 국민청원 게시 및 답변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답변된 청원]

10. 현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현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비서실 내 직원들의 직급별 급여, 성과급 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보수 규정」 제39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감찰반) 제1항에 의견한 1호~3호
감찰실적 현황 및 2항에 규정한 비리철폐 확인 실적/수사기관
수사의뢰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중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및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 (제16조 제1항 단서)

13.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해킹침
해시도, 정보 침해현황 등 피해발상 상세 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으로서
 - 경호구역 내의 전산시스템,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 현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 물품 구매 내역

- 연도별 구매계획서, 구매내역 리스트
-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내역
- 친환경제품 구매 내역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물품납품 등을 나타내는 구매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 9월말까지 물품구매 현황

< 물품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무별 내역	금액
'17.5월 ~ '21.9월	보안 및 기계장비 등	21,129

☐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9
중증장애인 생산품	147	246	204	269	76

☐ 중소기업제품 구매 내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9
중소기업 제품	12,237	15,221	17,847	17,290	7,813

☐ 친환경제품 구매 내역

< 녹색제품 구매 실적 >

(’2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9
녹색제품	279	542	511	451	339

15.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 감찰 관련 상세 내용 및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고

- 아울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및 인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고,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 (제16조 제1항 단서)

16. 취임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연도별, 월별 구분 내역) 및 임기 종료시까지 지급될 내역

□ 대통령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1년 대통령 연봉액은 240,648천원 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정무직 공무원 연봉 동결로 2020년도 연봉액인 238,227천원입니다.

17. 대통령 퇴임 이후 지내게 될 사저, 경호동 등 건립비용, 경호 비용, 퇴직 이후 지급될 연금, 퇴직 이후 배당되는 비서관급 인력에 지급되는 급여 내역 등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 현정부 출범이후 최근까지 NSC 개최 상세 현황 및 대통령 참석 내역(연도별, 일자별, 안건명, 대통령 참석 여부 적시)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1. 10. 20.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래와 같이 14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일자	안 건
'17.5.14.	北 미사일 발사
'17.6.8.	北 미사일 발사
'17.7.4.	北 미사일 발사
'17.7.29.	北 미사일 발사
'17.9.3.	北 핵실험
'17.9.15.	北 미사일 발사
'17.9.24.	北 주요 동향
'17.11.29.	北 미사일 발사
'18.5.25.	남북관계 현안
'18.6.14.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9.3.4.	2.28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9.4.5.	강원 고성 산불 상황
'19.4.5.	강원 고성 산불 상황
'21.1.21.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태영호 위원

1. 각종 감사결과 일체

-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 자체 감사, 총리실 감사,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전문 및 처분요구서
-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반드시 포함

□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2021년도 재무감사	지적사항 없음

※ 감사원 감사 이외 사항(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포함)은 해당사항 없음

2. 각종 위원회의 권고 및 지적 사항, 위원회별 참석 현황 및 지급수당 등 운영에 관한 내용

-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및 지적사항 받은 바 없습니다.

3. 각종 옴부즈맨 운영 결과 및 부처 소관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실정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산하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징계 유형별, 처분별 현황

-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5. 분야별 각종 민원 현황

- 연도별, 분야별, 민원별

-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6. 최근 3년간 분야별 보안사고 현황 및 비밀누설 및 훼손 등 비밀 및 보안 관련 법규 위반 현황

- 연도별, 실국별, 유형별, 처분별 현황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각종 설문조사,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산하기관 경영평가, 고유사업 추진 실적평가, 조직 진단, 고객만족도 등 결과 및 산하기관 성과급 지급 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겸직금지 의무 및 영리의무 위반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 현황이 없습니다.

10. 부처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협회 및 소관기관 재취업 등 전관 예우 현황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분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관련 수사개시통보 15건, 결과통보 13건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김영란법 위반 현황

-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음주운전 현황

- ☐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은 1건(직권 면직)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미투현황 및 직원 성폭력 범죄 현황

- 연도별, 부서별, 처분별, 유형별, 사유별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 현황이 없습니다.

16.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 용역명, 수탁기관, 기간, 금액, 계약방식, 과업지시서 등

□ 2017년 이후 청와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탁기관, 과업지시서, 정책반영 여부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7	주요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9.0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9.2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9.7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재고	9.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9.3
2018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분석	9.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9.5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27.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9.5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9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9.7
	시민사회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18.6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 방안 연구 방안	29.0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9.75
	대외 외교 경제 주요 현안 관련 조사 연구	28.5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인력 적정 규모 산정모델 연구	9.4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21.3
	UN SDGs 추진을 위한 민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 및 방향	38.5
	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9.9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9.5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본 평화정제론 발전을 위한 시사점 연구	9.4
	중.단기 주요 외교안보분야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9.8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성과와 과제	9.5
202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38.8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39.0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25.5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21.5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19.0
	임대차3법 등 부동산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 기반 연구	28.5
	러중관계 현황 및 전망	8.0
	미 인도태평양전략 下 군사력 운용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8.6
	한반도정책 관련 대미 정책소통 추진방향	7.9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7.9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용을 위한 전략	7.7
2021	코로나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 전망	8.0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7.9
	주요국의 대중 의존도 및 대중정책 상관관계	7.8
	국제질서 재조정기 한국 정부 대외전략과 대북정책 :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5.0
	바이든 신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5.0

17. 시민단체 지원 현황

- 연도별, 단체별 지원금 및 지원 내역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 업무추진비 및 특수업무경비 사용 현황

- 연도별, 부서별 세부내역, 목적, 금액, 용처, 관련 법적 근거

☐ 연도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18년	7,194	7,109	9,650	9,650
‘19년	7,194	7,111	9,650	9,650
‘20년	6,690	6,374	8,846	8,846
‘21년 7월말	6,475	2,826	8,685	5,34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경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경비로서,

-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위원회 포함 직원 해외 출장 및 해외연수 관련

- 출장인원, 성명 (동행인 포함, 직책), 출장 시작 및 종료일, 출장국 (도시), 방문기관, 사유, 경비(항공료, 체제비)
- 결과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